5월단체 도청별관 철거 반대 농성 재개 한달

추진단, 공권력 동원 공사 강행 수순 밟나

이번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양측 두차례 만남 기존 입장 되풀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와 5월 단체 회원들이 최근 광주시 서구 한 식당에서 별관 철거 문제를 놓고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가 지난달 17일 옛 도청 별관 철거 반대 농성을 재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별관 논란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원점을 맴돌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과 5월 단체가 문화전당 내 옛 도의회건물 철거에 합의, 지난해 12월9일 중단된 공사가 3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추진단은 지난 11일부터 옛 전남도의회 건물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도청별관 철거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는 사실상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추진단과 5월 단체는 2차례 공식 만남을 가졌으나, 양측의 기존 입장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측은 '원형 보존-철거'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만남에서 서로의 시각차를 존중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키로 했지만, 별관의 처리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진단이 예고했던 법적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별관 철거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추진단은 지난 10일 광주고검이 국가소송 지휘 및 소 제기에 대해 공식 승인을 함에 따라 옛 도청 별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5·18유족회와 부상자회를 상대로 이번 주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현재 변호사와 가처분 신청 문안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5·18 단체 회원들의 도청 별관 진입 금지 등의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공사방해금지, 공사경계 범위내 접근금지 조치가 포함돼 이를 어길 경우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는 5월 단체들의 농성투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접근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회 위반금을 물게 되고, 공사방해금지 결정을 위반하고 농성을 지속할 경우 형사상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한다.

추진단은 법적 조치와 별개로 5월 단체와 대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미 예고한 대로 국책사업의 장기중단을 묵과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내게됐다"며 "법적으로 5월 단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 조치는 추진단이 공권력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도 해석되고 있다.

추진단은 그동안 "3월을 넘길 경우 물리적으로 2012년 문화전당 완공을 이뤄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5월 단체와의 협상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이 극단적으로 별관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 등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예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별관 사수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5월 단체는 '폭행사건'이라는 돌출악재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달갑지 않은 처지에 놓였다. 이번 사건이 철거를 주장하는 추진단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농성 중인 5월 단체 일부회원들이 지난 15일 임낙평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폭행한데 대해 시민단체와 조성위원들이 일제히 사과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단체 관계자는 "추진단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기로 해놓고 법적 대응에 나서 유감이다"며 "향후 법적조치의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발적인 폭행사건이 너무 확대해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별관 원형 보존이라는 당초 입장에서 3분의 1 철거라는 양보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추진단이 한발 물러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영철 대법관 사퇴 고심

윤리위 회부…국회 법사위 사퇴 공방

'촛불재판' 관여 논란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이 침묵하고 있다.

신 대법관은 지난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발표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서울 시내 모처에 머물렀다가 17일 오전 8시45분께 취재진을 피해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는 등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퇴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현직 대법관이 윤리위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금명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과 '윤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윤리위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최송화 위원장이 날짜를 정해 소집하게 되며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위가 열리더라도 5명의 위원은 외부인이지만 나머지 4명은 법원행정처 차장 및 윤리감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내부 인사여서 진상조사단의 결론이 뒤집히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대법원 긴급현안보고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은 "거취 문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재판 관여사실이 드러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거취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부분"라며 "특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거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유선호 위원장은 "법관의 독립성이 법원 내부에서 지켜지지 못한 것은 충격이자 사법 60년사에 기록될 오점이 아닐 수 없다"며 "대오각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사퇴를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 U대회 광주 실사 D-19

최근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를 기원하며 열린 '희망! 2015 리본달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유치기원 글을 적은 리본을 달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다시 나섰으며 오는 5월23일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국 홍보 투어·시민 걷기대회·외국인 유학생 한마당 축제…

유치 붐 조성…실사 준비 본격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유치의 분수령인 실사단의 광주방문을 앞두고 광주시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광주를 방문,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는 도시의 국제대회 개최 역량, 스포츠 인프라, 사회·경제적 상황, 접근성, 정부의 지원 의지, 유치 열기 등에 초점이 맞춰 진행된다.

특히 실사단이 해당 도시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살펴본 뒤 제출하는 평가보고서는 후보지를 직접 둘러보지 않고 투표를 하는 FISU 집행위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에따라 시는 경기장·숙박시설 등 각 분야별 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최종만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종합준비단을 구성했으며, 오는 19일 FISU 실사대비 준비상황 첫 보고회를 통해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U대회 유치 붐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희망 2015 리본달기' 출범식을 가진 뒤 이날부터 전국 홍보 투어에 나섰다. 홍보투어는 전국민 100만명의 U대회 유치염원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시 새마을회와 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한다.

오는 22일에는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하는 '범시민 2015 걷기대회'가 열린다.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범시민 2015 건강걷기대회', U대회 유치를 기원하는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19일부터는 북구 일곡공원에서 개최되는 '하계U대회 유치기원 2015보(m) 걷기운동'을 계기로 3월말까지 자치구별 걷기 행사가 전개된다.

시는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유학생 2천명이 참가하는 한마당 축제를 열어 U대회의 광주개최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국내·외 대학생 150명을 사이버홍보 사절단을 위촉해 대외적으로는 FISU 집행위원 27개 국가 주요대학과 연계 홍보를 실시하는 등 유치홍보 분위기 조성에도 총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U대회 유치는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 없이 불가능하다"며 "실사준비와 각종 U유치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열기를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